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역발전

- (한국)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: 충청남도 사례
- (일본)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를 향한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
- (미국) 조지아 주 Gwinnett 카운티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

지방재정

- (일본) 일본 지자체의 산림환경세 도입현황과 과제

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: 충청남도 사례

충청남도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도입배경

- 국가의 경부축 중심 개발과 수도권 영향으로 천안, 아산 등 북부권 산업입지가 증가하고 천안-대전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만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서남부권 저성장 초래
 -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추진 중이었으나 각 부처별 성격에 적합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 추진이 되지 않아 시너지효과 창출 미흡, 지역개발사업들이 도로 등 대부분 기반시설부문에 투자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
-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,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2007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도입
 - 당시 4대 권역별 성장거점 동력을 연계하여, 충남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, 사업지원

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와 추진시스템

- 국가에서 지정한 낙후지역과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흥성과 예산을 제외하고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8개 시군을 선정
 - 2007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6개 지표에 따라 8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나 현재는 인구감소, 고령화, 취업기반, 소득수준, 기반시설 등 17개 지표로 변경하고 표준화점수에 의한 평 균이하지역 선정
-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-개발계획-시행계획의 3단계 계획을 수립하며, 기본계획에는 ①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, ②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, ③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, ④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포함
 - 기본계획: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 검토하여 재정비
 - 개발계획: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균형 발전 개발계획 수립

- 시행계획: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| 그림 1 | 충청남도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상지역



- 종합계획, 권역별-분야별 발전전략 및 과제 등과 연계하여 사업발굴, 시군간 연계형 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
 - 도 제안사업, 시군경쟁공모사업, 시군자율사업의 3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,
 - 공모를 통해 경쟁성 부여, 내실 있는 사업발굴 추진
- 전국에서 최초로 2007년 3월에 「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」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
 - 도 보통세에서 재원을 확보하고,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
-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, 제안된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심의
 -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,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, 균형발전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선정·심의

【 표 1 】 충청남도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(2021~2030) 유형별 사업발굴방식

유형	도 제안사업	시군 경쟁공모 사업	시군 자율사업
절차	시군협의 후 실국제안	도 협의 후 시군제안	시군제안
	시군·실국 안내 ↓ 실국 제안서 작성(시군 협의) ↓ 심의(서면) ↓ 선정	사업 공모 ↓ 시군 제안서 작성 ↓ 심의(서면·발표) ↓ 선정	시군 제안서 작성 ↓ 심의(서면) ↓ 선정
사업내용	• 사업규모: 2~3건 (年100억원) • 사업종류: 전 분야+ 시군 연계형 • 선정기준 - (계획) 타당성, 충실성, 준비도 - (운영) 체계, 효과성, 수혜도	• 사업규모: 5~6건 (年300억원) • 사업종류: 지역특화산업 • 선정기준 - (계획) 타당성, 충실성, 준비도 - (운영) 체계, 효과성, 수혜도 ※ 시군 연계형 사업은 가점	• 사업규모(시군별): 4~5건 (①·②유형사업 선정 후 잔여액 이내에서 배정) • 사업종류: 전 분야 • 선정기준 ※ 기 공지한 배제사업은 제외
집행방식	도 또는 시군 집행	실국예산배정→시군집행	실국예산배정→시군집행
예산분담	기준 비율 대비 도 분담 비율 상향		기준 분담 비율

자료: 박진경·김현호, 「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자치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
시사점

-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변화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, 계층 간 불균형, 부문 간 불균형 등 불균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국가와 광역은 모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
 - ‘균형회복’의 의미 속에는 지역 간 ‘불균형 해소’뿐만 아니라 ‘삶의 질 보장’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
- 국가가 추진하는 보다 광역적인 ‘국가’균형발전정책과 광역이 추진하는 보다 특화된 ‘지역’균형발전정책을 다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
 - 불균형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보다 광역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과 보다 실제적 삶의 질 영역에서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상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
- 기존 중앙정부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균형발전정책 과 이를 구동하는 추진시스템 필요
 - 현재 균형발전정책은 균형발전정책의 내용이나 콘텐츠보다는 추진시스템, 즉 추진체계가 중요
 -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관련 특별회계 및 광역주도의 추진시스템 필요

참고문헌

- 박진경(2020), “광역주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”, 「2020년 충남연구원 전문가 공동세미나」, 충남연구원.
- 박진경·김현호, 「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
박진경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연구위원)